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1994. 1~3)

1994. 3. 31

정 규 섭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남 궁 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정 영 태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김 성 철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허 문 영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目 次

I. 概況	1
II. 對南誹謗 強化	2
1. 概觀	2
2. 經過	4
3. 分析	6
4. 展望	7
III. 北韓의 IAEA 「制限的」核査察 受容과 美·北韓 實務接觸	8
1. 概觀	8
2. 經過	9
3. 分析 및 展望	16
IV. 特使交換 實務接觸	17
1. 概觀	17
2. 經過	18
3. 分析	21
4. 展望	22

V. 南北經濟交流	23
1. 概觀	23
2. 經過	24
3. 分析	26
4. 展望	27
VI. 朝總聯 動向	28
1. 1994년도 主力課業 採擇	28
2. 組織強化 및 北韓政策 支持 活動	29
3. 對北韓 經濟支援 活動	31
4. 次世代 組織強化 및 權利擁護運動	32
5. 北韓의 對朝總聯 要求 및 支援	33
6. 綜合 分析 및 展望	34

I. 概況

- 북한은 현재 體制維持를 최대 목표로 설정하여 대내적으로 주민 思想統制 강화 및 김정일 後繼體制 공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중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 해소를 위해 「통제된 개방」 및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經濟難과 관련, 북한은 1993.12.8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향후 2~3년의 완충기 동안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 추진을 결정하였음.
- 또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對美 直接協商을 통한 核問題 및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對南次元에서는 남북공존 모색 및 통일전선전술의 추진이라는 二重性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정책방향은 1994년 ¼분기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음.
- 1994년 ¼분기 동안 北韓 核問題를 둘러싸고 미·북한 협상, IAEA·북한 협상 및 사찰 등이 이루어졌으나,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유엔안보리는 4.1 북한에 대하여 추가사찰 수용과 남북대화의 재개를 포함한 내용을 담은 「안보리의장 성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음.
-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對南動向을 결정짓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994년도 ¼분기 북한의 대남동향의 주요

특징은 對南誹謗 강화 및 외형적인 南北對話, 남북경제교류 정채 등으로 나타남.

- 북한은 1994년에 “문민정권을 반드시 총결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남한 및 해외동포들의 同參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한편, 문민정권의 타도를 위해 각계각층을 포섭하는 統一戰線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3.3~19 동안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實務接觸이 5차례 개최되었으나 북한은 「서울 불바다」를 언명하면서 남북대화를 결렬시켰음.
- 북한 핵문제 미해결에 따른 전반적인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南北交易 規模는 정체되고 있으나 임가공교역은 증대하고 있음.
- 한편 조총련은 통일문제 및 핵문제 관련 정책에 대한 일본 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言論活動을 강조하는 한편, 김정일 後繼體制에 대비한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면서 「차세대 조직강화」에 매진하고 있음.

II. 對南誹謗 強化

1. 概觀

-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족우선론’과 ‘공존·공영’ 정책을 표명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1993.4.8)하는 동시에, 4월 말까지

對南誹謗 회수를 월 평균 10회 내외로 낮추었으나, 국제적 핵사찰 압력과 남북대화 교착상태의 지속에 따라 1993년 5월 이후 대남비방의 강도를 다시 높이기 시작하였음.

○ 북한은 1994년에 들어와 김일성의 1994년 「신년사」를 통하여 한국정부를 격렬히 비난하기 시작한 이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人身攻擊과 더불어 ‘문민정부’를 ‘반민주·반민족·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한 후, ‘타도’할 것을 본격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시작함.

- 북한은 「평양방송」, 「구국의 소리」, 「로동신문」 등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문민정부의 타도’ 등 對南誹謗을 다시 강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로동신문」은 1994.2.17~3.6 동안 12차례에 걸쳐 “김영삼 반역 「정권」은 타도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연재물을 게재하였음.

- 북한은 黨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한국민족민주전선」, 「범민주연합 북측본부」 등 각종 단체의 「고발장」, 「선언문」, 「호소문」 등을 통하여 남한내 反政府 鬪爭을 적극 선전·선동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북한은 이기택 민주당대표 방북환영 담화발표(1.15), 문익환 목사 조문단 파견제의(1.20), 남북 천도교간의 「동학농민운동」 100주년(3.21) 기념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접촉제의(1.24) 등 對南攪亂을 위한 統一戰線戰術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음.

2. 經過

-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남조선 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이 현 남조선 <정권>에 대하여 더이상 지켜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옹당한 일입니다”라고 주장한 이래, 1.5 「한국민족민주전선」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시국선언’과 43개의 ‘당면 투쟁구호’를 제시하였으며, 1.25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 총회에서 1994년도 活動方向을 설정하였음.
 -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주요 鬪爭口號는 “김영삼 매국파쇼 <정권> 타도하고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권 수립하자,”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주 실현하자,” “남북대결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이룩하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을 발전시키자” 등인 바, 이는 반파쇼민주화 투쟁, 反外勢 자주화투쟁, 聯邦制 통일, 統一戰線 구축을 강조한 것임.
 - 「범민련」은 1994년을 ‘민족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활동방향으로 “모든 계기를 이용하여 민족대단결운동을 벌일 것”과 “남조선 반통일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반정부투쟁을 선동하였음.
- 1994년 2월에 들어 북한은 UR 협정에 따른 남한 농민시위를 계기로 반정부투쟁을 선동(2.3~12)하는 한편, 2.13 「민민전」

논설 “한국사회 변혁 운동의 전략전술”을 통해 한국내 反政府運動의 전략·전술을 제시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주년 및 文民政府 출범 1주년을 기하여 대남비방을 고조시켰음.

- 「민민전」이 제시한 한국내 반정부투쟁 방법은 “정세변혁의 성숙정도와 결정적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투쟁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투쟁을 대담하게 개시” 및 시작한 투쟁을 끝까지 추진하여 “보다 큰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것임.

- 2.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김영삼 피뢰도당이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대죄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다”라는 告發狀을 발표하였고, 「조국전선」은 2.26 “문민정부를 타도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였음.

○ 북한은 1994년 3월 동안에도 문민정부 타도 및 근로자들의 임금투쟁, 반핵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김영삼 대통령의 訪日·訪中을 ‘반복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구걸’로 모략 비난하였음.

- 「민민전」 중앙위 백서(3.14) 및 「조선종교인협의회」 편지(3.30)를 통해 문민정부를 ‘사대매국 정권’으로 규정하고, 타도를 선동함.

- 「직총」 중앙위의 「호소문」(3.12) 및 「직총」 대변인 성명(3.24)을 통하여 남한근로자들의 반정부투쟁 선동 및 임금투쟁과

정치투쟁의 연계를 강조함.

- 「조선반핵평화위」, 「조선자연보호연맹」의 편지(3.14)에서 反核鬪爭을 선동함.
- 한편 「조국전선」 중앙위 호소문(3.29)을 통해 海外同胞들에게 팀 스피리트훈련 재개, 패트리엇 미사일 반입, 미 합선의 한국해역 진입에 대해 규탄할 것을 촉구함.

3. 分析

-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對象은 종전의 운동권·노동자·농민을 포함하여 해외교포·환경단체·종교인·군인·언론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바, 대상별 주요 煽動 內容은 다음과 같음.
 - 노동자들의 반정부 투쟁, 노조결성, 정치세력화 고무 선동
 - UR 정책 반대를 통한 농민들의 반정부 투쟁 선동
 - 문민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고 청년·학생들의 반정부 투쟁 유도
 - 反外勢政策을 표방하면서 해외교포 포섭 주력
 - 핵폐기물 처리방법을 중심으로 環境團體의 반정부투쟁 선동
 - ‘반통일정권’의 명령에 대해 軍人들에게 不服從 선동
-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비방 및 ‘정권타도’ 선동의 意圖는 體制維持 강화, 「主 대미 직접협상, 從 남북대화」 전략에 따른 對南 강경분위기 조성, 통일전선전술의 지속 추진 등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억제 및 내부결속 강화를 위하여 남한의 노동·농촌 그리고 제반 사회 현실이 극도로 열악한 인상을 주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한편, 對南 강경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킴.
- 核問題와 관련, 韓·美 共助體制 이간 및 對美 직접협상을 위하여 南北特使交換을 무산시키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필요한 바, '반통일·반민주·반민족 정권'과의 對話 不可라는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가 있음.
-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점차 약화되고 있는 '남조선혁명역량'의 강화를 위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약화시킴으로써 남한내 노동자·농민·학생·제야 등의 反政府 連帶鬭爭이라는 통일전선을 적극 조성하려는 저의가 있음.

4. 展望

- 북한은 현재 文民政府를 「반통일」·「반민족」·「반민주」적이라고 규정·비방해 왔는 바, 통일문제의 본질이 「자주화」와 「민주화」에 있음을 거듭 천명하면서 문민정부 타도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傳統文化의 정통성을 기초로 북한 중심의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표방하는 한편, 남한내의 社會問題에 초점을 둔 대남 선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1993년 단군능 발견이라는 상징조작과 함께 1993.12.10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는 바, 「민족정통성」을 표방하면서 「文化合作」 명목으로 통일전선 전술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은 특히 UR 문제에 따른 남한 農民의 심리적 좌절감과 이에 따른 사회문제화 조짐을 최대한 이용하여, 남한핵 명역량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선전·선동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계 각층이 연대·단결하여 통일전선을 형성, ‘반미 자주화투쟁’을 벌여 ‘자주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과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벌여 文民政府를 타도하고 민중민주주의에 기초한 聯合 「민주정부」 수립을 계속 선동할 것으로 전망됨.

Ⅲ. 北韓의 IAEA 「制限的」核査察 受容과 美·北韓 實務接觸

1. 概觀

○ 1993.7.14~1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단계 美·北韓 高位級會談에서 북한은 IAEA와 핵안전협정 이행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합의하였는 바, 이에 따라 1993.8~1994.2까지 수차례의 북한·IAEA간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査察範圍 및 方法

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노정되어 공전을 거듭해오다가 IAEA와 북한은 1994.2.15 사찰합의에 성공하였음.

- 이에 근거하여 1994.3.1~15 IAEA의 대북사찰이 실시되었으나,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사찰만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IAEA는 1993.2 마지막 사찰 이후 약 1년 동안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핵물질의 전용이나 재처리활동의 여부를 밝힐 수 없게 되었음.

- 한스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은 방사화학실험실을 제외하고는 어려움 없이 합의한 대로 사찰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IAEA는 北韓 核問題를 유엔안보리에 회부(1994.3.21) 하였으며, 유엔안보리는 4.1 북한에 대하여 추가사찰 수용과 남북대화의 재개를 포함한 내용을 담은 「안보리의장 성명」을 채택하였음.

2. 經過

가. IAEA의 對北 核査察 受容 決議案과 유엔 總會의 對北 決議案 採擇

- 제2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이후 1993.8 IAEA는 영변핵시설의 감시장비를 점검하기 위한 사찰단을 파견하여 배터리와 필름을 교환함으로써 사찰의 연속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북한·IAEA간 협상이 재개되어(1993.8.31) 영변의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IAEA 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제37차 IAEA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1993.10.5~8 개최 예정이었던 제2차 북한·IAEA간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IAEA 총회는 북한이 IAEA와 즉각 협력하고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1993.10.1)하였음.

- 이와 함께 유엔 總會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의무 불이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決議案을 찬성 140 대 반대 1 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채택(1993.11.1)하였음.

나. 北韓의 對美 直接協商 要求 및 「一括妥結」方式 提議

○ 북한은 IAEA와의 협상을 거부해온 대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해왔음.

-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담화(1993.11.12)를 통해 미·북한 쌍방이 서로 실시할 조치를 정해놓고 동시에 움직이는 「一括妥結」(a package deal)方式을 제의하였음.

- 미 국무부도 미·북한 공동성명서에서 확립한 원칙에 기초하여 제3단계 고위급회담에서는 기꺼이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책」(a comprehensive solution)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1993.11.23)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IAEA 사찰수용과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한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은 개최될 수 없다는 데 합의하였음.

- 단 兩國은 핵사찰 수용과 남북대화 재개의 2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북한과 핵문제에 대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법」(a thorough, broad approach)을 논의하고 북한 핵문제를 일거에 타결할 수 있다고 밝혔음.

다. 美·北韓 査察合意와 北韓·IAEA 協商再開

○ 「一括妥結」 또는 「包括的 解決」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뉴욕에서 1993.12.3~20 동안 3차례의 접촉을 가진 바 있으며, 12.29 뉴욕 접촉에서 북한은 일단 핵사찰에 합의하였음.

-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1993.12.30)에 따르면, 미국은 對北 核威脅 제거조치의 일환으로 팀 스피리트훈련 중단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북한은 이미 신고한 핵시설들에 대해 NPT 조약에 따른 정기·비정기 사찰이 아니라 순수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것임.

- 이후 북한은 IAEA와 사찰협상을 재개(1994.1.7)하였으나 사찰의 범위와 방법을 둘러싸고 IAEA와 異見을 보였으며,¹⁾ 1994.1.21 북한이 IAEA의 원칙론에 입각한 사찰수용 촉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부 선언을 하고 난 후에도 또 한차례 북한·IAEA간 협상(1994.1.25)이 개최되었으나 결렬되었음.²⁾
 - 북한은 1994.1.31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IAEA의 「핵 현황의 비정상적 변화 여부확인」을 위한 사찰 요구를 「전면사찰」 실현 시도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IAEA의 요구가 「연속성 보장」 요구에 필요한 사찰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IAEA와의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유엔 총회 회부시한인 2.21 IAEA 정기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북한은 2.15 IAEA의 7개 신고시설 사찰 수용의사를 통보하였으며, 2.25 미·북한 실무 접촉에서 양측은 ①1994년도 팀 스피리트훈련 중단, ②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3.21), ③IAEA사찰 수용, ④남북특

1)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정회원국이 아닌 만큼 IAEA가 요구하는 7개 핵시설에 대한 통상 및 임시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음을 주장한 반면, IAEA측은 7개 핵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찰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음.

2) 이 협상에서 IAEA측은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과 5MW급 원자로에 대한 사찰용 시료채취를 요구한 반면, 북한측은 同 시설물에 대한 배터리와 녹화 테이프 교체만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사고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 등 「4개 同時行動措置」에 합의 하였음.

-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2.21 IAEA 사찰 수용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합의된 사찰은 지난번 사찰 이후 핵물질이 다른 목적에 유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基本使命으로 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정기 및 비정기 사찰」 문제는 3단계 미·북한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핵문제의 一括妥結 방식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언명하였음.

라. 北韓의 「制限的」 査察受容과 IAEA의 對北 決議案 採擇

- 미·북한간 「4개 同時行動措置」 합의에 따라 IAEA 사찰단은 북한에서 3.1~15까지 사찰활동을 실시하였으나, 1993.2 이후 방사화학실험시설의 운전상황에 대한 계속성 있는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하였는 바,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지난 1년여 동안 핵물질의 전용이나 재처리활동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IAEA 사무국에 보고하였음.
- 이에 따라 IAEA는 3.21 특별이사회를 개최하여 대북 사찰이 불충분하였음을 공식화하고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決議案을 채택하였음.
 - IAEA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물질들이 핵무기나 기타 핵 폭발 장치에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기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IAEA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찰활동을 즉각 허용할 것과 핵안전협정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

○ 한편 IAEA의 사찰결과와 관련하여 3.18 북한은 원자력 총국 대변인 담화(1994.3.18)를 통해 이번에 진행한 사찰활동으로 북한의 핵시설들에서 핵물질이 유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담보의 연속성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가 불가능해지자 북한은 3.21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NPT 탈퇴강행 불가피 입장을 밝혔음.

- 원자력 총국 대변인은 IAEA 사찰단이 2.15 빈에서의 합의 내용과는 심히 어긋나게 정기 및 비정기 사찰에 맞먹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항변하였음.

-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IAEA에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을 더이상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키거나 IAEA가 북한에 대한 사찰결과를 왜곡하여 불공정성을 더욱 확대하면서 강권과 압력으로 나오는 경우, 민족의 주권과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작년 3.12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천명한 조치들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천명하였음.

○ 또한 북한은 IAEA 특별이사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3.24 원자력 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결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3.31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북한

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중단하고 양국 高位級會談을 재개한다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나 査察對象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이와 관련, 3.31 박길현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우리는 현단계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에게 더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명의 채택이 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마. 對北韓 追加査察 促求를 위한 「安保理議長 聲明」 採擇

○ 3.21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이후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他 상임 이사국과 북한 핵문제 처리에 대한 협상을 벌인 결과 중국측 주장이 크게 반영된 「안보리의장 성명」(1994.4.1)을 유도하게 되었음.

- 「안보리의장 성명」의 주요 내용은 ①IAEA가 북한의 핵전용 여부를 판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 ②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 완료 후 추가보고 요구, ③남북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대화, ④(북핵건)안보리 계류·불이행 땀 재심 등임.

○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장 성명 채택과 관련하여 4.4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을 비판하고, IAEA와 북한간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平和的 核活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음.

3. 分析 및 展望

- 현재까지 북한의 核協商 態度는 협상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핵협상의 主 상대를 미국으로 설정하여 핵문제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IAEA와의 협상은 가능한한 미국과의 협상관철을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이용하고, 남북대화는 가능한한 회피함.

- 이러한 북한의 협상태도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향후 북한은 다음과 같은 핵협상의 基本方向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 우선 핵해결의 수순을 가능한한 지연함으로써 완전한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함.
 -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하여 양국간의 관계폭을 넓힘과 동시에 한·미동맹관계의 약화를 도모함.
 - 핵협상에서 한국을 소외시키고 남북대화를 어렵게 하여 김영삼 정부의 對北政策 관련 '무능성'을 증폭시킴으로써 남한내 국론분열을 유도함.

- 따라서 북한은 가능한한 핵카드의 效用性を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IAEA의 핵사찰 요구를 지극히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미국과의 직접회담을 통한 정치적 협상을 지속해 나가고자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미·북한 실무접촉 재개를 통한 IAEA의 追加査察 수용과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

담 개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미국으로부터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南北對話 재개요구는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큼.

IV. 特使交換 實務接觸

1. 概觀

- 1993.1.25 제1차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 접촉을 끝으로 전면 중단된 南北對話는 1993.10.5~25까지 特使交換을 위한 3차례의 實務代表 접촉형식으로 재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북한측은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가지 前提條件을 내세워 절차토의를 지연시키다가 1993.11.4 예정된 제4차 접촉을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남북대화는 다시 전면 중단되었음.
- 북한측은 1994.2.21 IAEA 사찰 합의(2.15)와 관련한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1993.12.29 미·북한 뉴욕접촉에서 “남조선측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해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데 대한 문제”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2.28 한국측은 南北特使交換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 접촉을 3.1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음.
 -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은 1994.2.25 미·북한 뉴욕접촉 4개 합의 가운데 포함된 사항임.

- 한국측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3.3 개최로 수정제의하였는 바,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재개되어 1994.3.3 제4차 접촉 이후 3.19의 제8차 접촉까지 5차례 개최되었으나,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아무런 결실없이 결렬되었음.

2. 經過

- 1994.3.3 개최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측은 특사교환 절차논의를 위한 先決條件으로 기존의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외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 신형무기 반입 중지」,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약속할 수 없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 취소 등을 요구하였음.
 - 북한측은 이 4가지 사항이 특사교환을 좋은 분위기와 환경 하에서 시급히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함.
 - 1994.3.9의 제5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측은 제4차 접촉에서 제시한 4개 요구사항을 재촉구하는 한편,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 바, 특히 特使의 任務로 기존의 5개항³⁾에 「민족자주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문제」와 「조국
- 3) 북한측은 1993.10.5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특사의 임무로 ①조선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문

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방도 확정문제」 등 2개항을 추가하여 절차합의에 난관을 조성하였음. 북한측이 제시한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 修正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사의 급: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권위있고 책임있는 고위급
- 동행인원: 수행 10명, 취재기자 6명
- 교환방식: 남측 특사의 평양방문은 합의서 채택일부터 15일 내, 북측 특사의 서울 방문은 남측의 방문 종료 후 15일 내
- 체류일정: 각각 3박 4일

○ 제6차(3.12) 및 제7차(3.16) 접촉에서 북한측은 4개 요구사항의 타당성에 대해 남한측이 이해를 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사교환 실무절차 합의서 채택 이전에 “특사교환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특사를 교환하기로 완전히 합의하였다는 것을 공동보도 형식으로 내외에 공포할 것”을 제안하면서 實務節次 토의를 지연·기피하였음.

- 북한측은 제6차 접촉에서 「공동보도문」 발표는 특사교환 전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쌍방대표가 민족앞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표시라는 논리를 전개하였음.

- 북한측은 제7차 접촉에서 남한측이 실무문제 토의에 난관

제, ②긴장완화와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을 시급히 취할데 대한 문제, ③전민족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문제, ④최고위급회담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 ⑤그밖의 관심있는 일련의 현안문제 등의 협의를 제시한 바 있음.

을 조성하여 제3단계 조·미회담에 제동을 걸려한다고 주장 하였음.

- 3.19 개최된 제8차 접촉에서 북한측은 4개 要求事項에 대한 태도표명, 미·북한 회담 방해 인정 및 사죄, 戰爭不辭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특사교환이 위기에 처한 책임은 남한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렬시킴.
 - 이 회담에서 박영수 북측단장은 “여기서 서울이 떨지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라는 극언을 하였음.
-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결렬된 이후 북한측은 3.21 실무대표 접촉 북측대표단 성명 및 3.2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실무대표 접촉의 결렬 책임은 남한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南韓當局을 격렬히 비난하고, 反政府鬭爭을 고무·선동하였음.
 - 실무대표 접촉 북측대표단 성명에서는 “실무대표 접촉의 전 과정은 북과 남이 민족자주와 외세의존,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의 서로 다른 근본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전제하고, “남한의 각계각층 인민과 청년학생들은 남한당국의 반민족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는 남한당국이 特使交換과 南北對話를 전면 차단하고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규정하고, “남한인민이 단호한 투쟁을 벌여 매국노들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음.

3. 分析

- 북한측은 NPT 탈퇴선언 이후 「主 대미회담, 從 남북대화」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 바, 북한측이 남북특사교환을 실무대표 접촉에 호응한 이유는 2.25 미·북한 뉴욕접촉 4개 합의 가운데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를 실천하여 제3단계 美·北韓 高位級會談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됨.
 - 북한측은 남북대화에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외형적이거나 남북대화에 응할 수 밖에 없었음.
 - 북한측이 2개 前提條件을 추가한 것은 특사교환 실현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임.
 - 북한측은 특사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공동보도문」 채택을 통해 남북대화 진전을 표방하면서 對美 直接協商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측은 3.21 예정되었던 제3단계 미·북한회담 개최 무산이 기정사실화되자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戰爭不辭 등 對南强硬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바, 북한측은 내부결속 강화, 대미 협상카드 활용, 한·미관계 분열 유도, 남한의 국론분열 유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중단하였다고 분석됨.
 - 북한은 대내적으로 긴장상황을 조성하여 경제난 심화에 따

른 주민불만 및 사회일탈행위 증대 등 체제불안 요인에 대응하면서 體制結束을 도모함.

- 핵카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도출하려함.
- 대미 직접협상에서 남한을 배제시키고, 한·미 유대관계의 균열을 유도함.
- 대남강경정책을 공식화함으로써 남한 내부에 불안심리를 야기하는 한편, 對北 강경·온건론 등 남한의 國論分裂을 유도함.

4. 展望

- 북한은 당분간 남북대화 결렬 책임을 남한측에 전가하면서 대남 강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므로 南北對話가 단기일내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對北韓 制裁論議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회피하고, 대미 관계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대화 재개에 호응할 가능성은 있음.
- 그러나 북한의 「主 대미회담, 從 남북대화」 전략은 적어도 미·북한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므로, 북한은 美·北韓 協商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식적으로 남북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V. 南北經濟交流

1. 概觀

- 남북한 交易承認 規模는 1988년의 104만 달러에서 1991년 1억 9,217만 달러, 1992년 2억 1,350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1993년에는 1억 9,879만 달러로 감소하였음.
- 반출입 通關實績은 1991년 1억 1,127만 달러(반입 1억 572만 달러, 반출 555만 달러), 1992년 1억 7,343억 달러(반입 1억 6,286만 달러, 반출 1,056만 달러), 1993년 1억 8,659만 달러(반입 1억 7,817만 달러, 반출 842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였음.
 - 1993년 통관실적은 전년대비 반입은 9.4% 증가하였으나, 반출은 20.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5% 증가하였음.
- 1994년 1월에서 2월 말까지의 교역 승인실적은 2,401만 달러(반입 2,093만 달러, 반출 308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하였음.
- 한편 1994년 들어 두 달 동안의 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은 278만 달러로, 1993년 총 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 438만 5천 달러의 63%를 기록하였음.

남북한 반출입 실적(승인기준)

연 도	반 입		반 출		계
	품목수	금액(천\$)	품목수	금액(천\$)	금액(천\$)
1991	69	165,996	48	26,178	192,172
1992	93	200,685	34	12,818	213,503
1993	87	188,528	39	10,262	198,790
1994.1~2	31	20,932	15	3,078	24,010

2. 經過

가. 1월 動向

- 1월 중 남북교역 承認實績은 총 45건에 1,042만 1천 달러였으며, 이중 반입승인은 38건 825만 5천 달러, 반출승인은 7건 198만 6천 달러임.
 - 교역승인실적은 전년 동기(34건, 453만 5천 달러)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2.3배 증가하였음.
 - 반입승인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2.1배, 반출승인실적은 3.8배 증가하였음.

- 한편 搬入品目은 매월 80% 이상 차지하는 철강금속류가 23.6%(194만 8천 달러)로 대폭감소한 반면, 농산물이 234만 4천 달러로 28.4%, 섬유류가 177만 7천 달러로 21.5%이며, 반출품목은 벤젠, 폴루엔 등 화학제품이 120만 달러로 60.4%, 위탁가공교역 원부자재인 섬유류가 60만 3천 달러로 30.4%임.

- 交易參與業體는 22개 업체이며, 증개지는 홍콩 32건, 일본 10건, 중국 1건임.
- 위탁가공 교역승인실적은 5건 110만 6천 달러(반입승인액 기준)로 여름용 자켓, 바지가 승인되었음.

나. 2월 動向

- 2월 중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총 48건 1,257만 8천 달러였으며, 이중 반입승인은 39건 1,187만 9천 달러, 반출승인은 9건 69만 5천 달러임.
 - 교역승인실적은 전월의 48건 1,143만 2천 달러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 10%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31건 1,909만 2천 달러에 비해서는 34.1% 감소하였음.
 - 반입승인실적은 전월에 비해 31.2% 증가하였으나 반출승인 실적은 70.6% 감소하였음.
- 한편 搬入品目은 금괴, 아연괴, 빌레트 등 철강금속류가 874만 1천 달러로 73.6%를 차지하였으며, 섬유류가 165만 9천 달러(13.9%), 농·임산물 59만 7천 달러(5%)이며, 반출품목은 의류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원부자재가 51만 1천 달러로 73.1%, 화학제품이 18만 8천 달러로 26.9%임.
 - 交易參與業體는 21개 업체이며, 증개지는 홍콩 39건, 일본 5건, 중국 3건, 싱가포르 1건임.

- 위탁가공 교역승인실적은 9건 97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배 증가하였으며, 여름용 반바지와 수영복 등이 승인되었음.

3. 分析

- 남북한 교역은 1991년 이후 交易規模가 연간 2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그것도 대부분 반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반입 위주의 남북한 교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외화부족과 주민통제를 위하여 남한 상품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데 기인함.
 - 1993년 남북한 교역 중 반입의 비중은 승인기준으로 94.8%, 통관기준으로 95.5%임.
 - 1994년 2개월 동안 반출입 승인은 2,401만 달러이며 이중 반입승인이 87.2%임.
- 남북한 교역은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한 순수한 간접교역과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북한측 당사자와 직접협의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는 해외중개상을 통하는 間接交易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근본적으로 그간의 남북교역이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선언과 조치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상응하는 북한측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기인함.
 - 1993년 반출입 총 554건 중 홍콩, 일본, 중국 등 제3국을 교역중개지로 하는 간접교역이 98.3%임.
 - 1994년 2개월 동안의 반출입 총 93건 중 91건인 97.8%가 간접교역임.

4. 展望

- 북한의 경제난 심화에 따른 교역대상물자 및 결제능력 부족, 북한 핵문제 미해결에 따른 전반적인 南北關係 경색으로 인하여 현재 남북교역 규모는 정체되어 있는 바, 이는 北韓 核問題 해결이 진전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1993년 섬유류를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교역이 전년대비 7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1994년 들어 두 달 동안의 委託加工 교역승인실적은 278만 달러로 1993년 총 위탁가공 승인실적의 63%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할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남북위탁가공 교역실적(승인기준)

연 도	건 수	금액(천\$)	비 고
1991	1	23	학생용 가방
1992	9	529	가방, 배낭, 의류, 신발갑피
1993	42	4,338	의류, 봉제완구, 신발갑피
1994.1~2	15	2,780	남자자켓, 작업복, 반바지

VI. 朝總聯 動向

1. 1994년도 主力課業 採擇

- 朝總聯은 1994.1.10 중앙열성자대회를 개최하여 1994년도 主力課業으로 ①조총련을 김정일에 충실한 주체형의 해외교포 조직으로의 강화 발전, ②동포 속에 뿌리박은 생활력있는 조직으로 발전, ③민족권리 옹호 및 교육사업 강화, ④「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실현을 위한 전동포적 운동 전개, ⑤일본내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대외사업 강화 등 5개항을 채택하였으며, 이 내용은 김정일 後繼體制 강화와 일본내 대조총련 지지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임.
 - 1993년도 주력과업에서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부각시킨 특징이 있음.
 - 1991년부터 표명해 온 일·북한 早期修交 실현에 대한 강조 대신에 일본내 지지자 및 동조자 확대를 강조한 것은 조총련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조총련은 실제로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기 위해 1994년을 「김정일위대성 교양의 해」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각종 모임을 통해 「김정일 따라배우기운동」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 제1부위원장 李珍珪를 비롯한 의장단, 국장들, 각 본부위원장

들이 참석한 총련본부 위원장회의(1.27~28)에서는 전반적인 조직강화와 함께 「김정일 따라배우기운동」을 추진하여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제고에 진력할 것을 결의하였음.

- 의장단과 산하단체 및 계열 동포들이 참석한 중앙대회(2.15)에서는 조총련을 김정일에 충직한 애국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함.
- 조총련은 김정일 52회 생일(2.16)을 맞아 책임부의장 허종만 일행, 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문병원 일행, 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 등을 평양에 파견하고,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다짐하는 축하문을 발송하였음.
- 3.18 개최된 「김정일의 위대성 따라배우는 중앙연구토론회」에서는 사상·이론 교육사업, 정치선전사업, 연구사업, 언론출판활동, 문학예술활동, 후대육성사업의 확산을 강조함.

2. 組織強化 및 北韓政策 支持 活動

- 총련본부 위원장회의에서 전반적인 組織強化를 결의한 이래 조총련은 조직강화를 위하여 계열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모임과 호별 방문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4)
- 효고현 고베지부의 경우 각 분회, 여성동맹, 상공회 등의 조직대표들이 「고려문화구락부」를 결성하여 조직원 확보에

-
- 4) 최근 일본 공안조사청장에 의하면, 조총련계는 24만 7천명이지만 그 중 조총련 가맹자는 5만 6천명에 불과하며 중립계가 6만 3천명을 차지한 것으로 추산됨.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산하 청년조직인 「조청」 사마다현 남부지부는 청년학교를 운영하여 세대교체에 따른 조직의 이완을 최소화하고자 함.

○ 또한 조총련은 일본내에서 대북한 支持勢力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담화 발표, 신춘강연회 개최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함.

- 상공연합회 이사장, 청년동맹위원장, 여성동맹위원장 등은 연방제 통일방안, 미·북한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 등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함.

-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설명하고 對北 支援事業을 독려하는 신춘강연회를 일제히 개최함.

- 이러한 활동과 함께 조총련 기관지 「朝鮮新報」는 1.19 일본 언론이 조총련의 주장을 잘 게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투고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하기도 하였음.

○ 한편 조총련 책임부의장 허종만은 3.22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외세의 힘에 의존해 동족과 대치하려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일본측에 대해서 對北韓 制裁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하여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였음.

3. 對北韓 經濟支援 活動

-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조총련은 언론매체를 통해 대북한 投資事業 및 送金을 위한 재원 마련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함.
 - 상공연합회 이사장 엄장범은 「朝鮮新報」와의 대담에서 대북한 合作 및 合營사업의 강화 방침을 밝힘.
 - 대북한 투자사업은 조총련 合營사업추진위원회가 주도로 추진되어 1993년 12월 말 현재 120개의 회사를 설립함.⁵⁾
 -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조신협) 회장 김재규는 「朝鮮新報」와의 신춘 대담에서 조총련 계열 상공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촉구함. 이는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일본은행의 대조총련 기업 대출 기피현상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대북한 투자 또는 송금 목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⁶⁾

- 한편 북한은 일본언론이 核問題와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있을 경우 일본당국도 조총련의 대북한 送金規制를 검토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한 것과 관련 일본언론을 비난함 (2.15).⁷⁾

5) 合營추진위는 작년 12월 11일 사망한 조총련 부의장 겸 상공련 회장인 전연식이 이끌어 왔음.

6) 조신협에는 3천3백여명의 직원과 5천여명의 열성 조합원, 21만명의 계열동포 조합원이 있으며 2조 4천억엔의 수신고를 보유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평양방송」은 논평을 통해 “강력한 사회주의 나라인 우리 공화국이 해외교포단체인 총련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보도는 조총련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4. 次世代 組織強化 및 權利擁護運動

○ 조총련은 「민족결혼사업」과 조총련계 학교에의 신입생 유치 사업을 추진하여 世代交替에 의한 組織瓦解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어 「朝鮮新報」(1.28)는 “20살을 맞는 동포 청년학생들의 결혼문제를 두고”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조총련 계열 청년들의 국제결혼(일본인과의 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중앙과 지방에 결혼상담과 정보교류를 위한 결혼상담소 개설을 확대할 것을 촉구함.

- 또한 「朝鮮新報」(2.21)는 “학생인입사업에 총력을”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새학기를 맞아 학교 전직원들의 학생유치 사업과 일본학교로의 전학방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함.

7) 일반적으로 조총련의 대북 경제지원 형태는 직접 송금, 친척 방문시 현금전달, 대북한 무역, 합영사업을 통한 투자 등임. 최근 일본 공안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조총련은 한해 6백~8백억엔 정도를 유출시키고 있음.

- 이와 함께 조총련은 在日同胞의 권리보호를 위해 1994.2.5 「재일조선인 인권협의회」를 결성하는 한편, 「동포권리옹호 3개월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인권협의회는 변호사, 세무사, 사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들과 권리문제 연구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관련, 조총련 중앙위는 2.21 호소문을 발표하여 계열 동포는 물론 민단과 미조직동포, 일본인까지 확산해 나가자고 촉구함.

5.北韓의 對朝總聯 要求 및 支援

- 「평양방송」은 1.4 조총련의 세대교체로 조직이 이완되고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사상적 해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사상강화가 조총련의 금년도 最大課題라고 강조한 데 이어, 1.6 조총련이 聯邦制 통일투쟁을 확산할 것을 촉구하였음.
- 북한은 이와 함께 김일성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해설·선전하는 사업과 함께 한국민의 반정부투쟁 및 통일투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조총련의 조직강화를 위해 교육지원비 명목으로 신년 및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여 두 차례에 걸쳐 支援金を 송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새해를 맞아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명목으로 1억 9백95만

엔을 송금하였고(12.30), 김정일 생일을 맞아 다시 1억 8백 20만 엔을 송금함.⁸⁾

6. 綜合 分析 및 展望

○ 조총련은 1994년에 들어 일·북한 수교 대신에 통일문제 및 핵문제 관련 정책에 대한 일본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言論 活動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수교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對北韓 輿論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추진의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러한 전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여론은 현실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음.

- 더욱이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일본정부는 조총련 송금을 규제할 의사가 있음을 내보이고 있을 정도임.

○ 조총련은 내부적으로는 사상사업에 있어서 김정일 後繼體制에 대비한 김정일 우상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조직사업에 있어서 세대교체에 의한 조직의 와해를 우려하면서 「차세대 조직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은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8) 북한은 1957년 이래 1백26회에 걸쳐 총 4백19억 8백19만 2천 4백 33만엔을 송금하였음.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 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豫測(I)
-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
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對外개방 現況과 전망: 外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中心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1994. 1~3)

統一情勢分析 94-08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삼신인쇄(주) 전화 : 337-0014

印刷日 1994년 4월 일

發行日 1994년 4월 일
